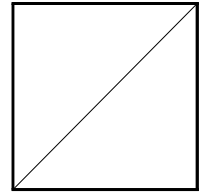


공개



의안번호	제 170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9. 20. (제 16 차)

의
결
사
항

(주)퀀트인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김 소 영
제출연월일	2023. 9. 20.

1. 의결주문

- ☐ (주)퀀트인자산운용에 대한 과징금 3억 5,090만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주)퀀트인자산운용의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2023년 제11차 증권선물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23.5.31.)과 관련하여 2023.7.7. (주)퀀트인자산운용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 이의신청 기각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3 제1항 제1호, 제180조 제1항

다. 관계부서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주)퀀트인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안

증권선물위원회는 (주)퀀트인자산운용이 2023. 7. 7. 신청한 과징금 3억 5,090만원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인적사항

- (주)퀀트인자산운용 [국내 금융투자업자]

☐ 기각사유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당초 조치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이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함
 - ① 착오에 의한 공매도 이후 부족 수량을 당일 매수하여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매도 위반 행위에 해당함
 - ② 단순 주문 실수(과징금 산정시 '하향조정사유' 반영)이고, 공매도 위반행위 후 해당 종목의 재매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정 등을, 과징금을 산정*시 이미 반영하였음

* 위반행위로 손실(중요도 '하' 해당)이 발생하였으나, 공매도 주문금액(11억 6,970만원, 전액 체결)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4%에 해당하여, 위반행위 중요도를 '중'으로 적용 [①공매도 주문금액 비중, ②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규모를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

- ③ 공매도 주문 이후 당해 종목 매수 정리는 위법행위 시정이 아닌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조치에 불과하며, 이미 위법 공매도가 발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위법 공매도 행위 이전(以前)으로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④ 당해 종목 매수 정리* 및 재발 방지 조치는 과징금 부과기준 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해당 전례도 없어, 오히려 조치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용할 수 없음

* 단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공매도 사실을 인지한 이후 해당 종목의 동일한 수량을 (재)매수하거나 차입하여 결제 불이행을 차단하는 행위는, 착오에 의한 공매도 위반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양태임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29조의3(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③ 법 제1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 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상장증권의 매도
2.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에 따라 받게 될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에 따라 받게 될 상장증권의 매도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28조제3항·제4항,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가. 법 제428조제4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 2)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류차단대상정보를 이용하게 된 경위
- 3)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 제429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계량적 위반 사항과 비계량적 위반 사항으로 구분하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 1) 위반행위가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 2) 위반행위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법 제429조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178조의2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구분하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 2)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또는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 (법 제178조의2제1항의 행위로 한정한다)

- 3)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 4)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라. 법 제42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 1) 공매도 주문금액
 - 2)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법 제429조의2 또는 법 제42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도 이와 같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2. 통 칙

나.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 (1) 과징금 부과액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을 정한다.
- (2) 기준금액에 이 기준에서 정한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되, 법 제4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시서류 중 하나의 공시서류에 여러 종류의 허위 기재·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표시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3) 이 기준 6.에서 규정하는 최저부과액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액의 100분의 50(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한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 (4) 위반자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에서 감경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고,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한다.
- (5) 이 기준에 의해 산출한 부과과징금이 제4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항의 법정한도액을 부과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 제3항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은 위반행위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6)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액 중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사.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신설 2021.4.6.>

- (1) 기준금액은 법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으로 한다.
-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5) 법 제429조의3 제1항의 경우 <신설 2021.4.6.>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60	100분의 40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30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20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4) 법 제429조의3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신설 2021.4.6.>

구분 \ 중요도 ^{주1)}	상	중	하
법 제180조 ^{주1)}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0% 미만 1% 이상	공매도 주문금액이 해당 종목 일 거래금액의 1%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이상 5억원 미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0원 미만

주1) 두 가지 판단항목을 각각 고려하여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등급을 적용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개정 2015.7.14.><개정 2021.4.6.><개정 2021.5.12.>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또는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위반 또는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가 고의이거나, 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우 · 2년 이내 3회 이상 5%보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의무 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보고를 지연 혹은 미보고한 경우
하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다만,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다만, 5%보고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동기가 과실(중과실은 제외한다)이면서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 부도발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삭제> ·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삭제>

** 법 제180조 위반의 경우에 한함

5. 과징금의 감면

- (1) 위반자가 이미 제출하였거나 같은 시기에 제출한 다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투자자가 진실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한다.
(다만,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법 제429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지체없이 시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본과징금에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경한다. (단, 시정일수 산정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정일수	3일 이내	4~6일	7~10일
감경비율	50/100	30/100	10/100

- (3)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액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감경한다.(다만, 법 제429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기타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형벌, 과태료, 과징금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제재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 (5)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7.14.>

- (6) 감면사유가 복수인 경우 감경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5.7.14.>

$$\text{감경금액} = [(\text{기본과징금} \times (1) \text{의 감경비율}) + [(\text{기본과징금} \times (1 - (1) \text{의 감경비율}) \times (2) \text{의 감경비율}) + (3) \text{ 또는 } (4) \text{의 감경금액}]$$
- (7)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5.12.>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조사1국
연 락 처	02-2100-2605	02-3145-5576